

www.kita.net



EU 통상정보

2025.02.04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 Compass)」 주요 내용

브뤼셀지부 (kba@kba-europe.com)

I 경쟁력 나침반 추진 배경

- EU 집행위는 현 집행위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쟁력 강화 정책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 Compass)」을 통신문(Communication)* 형태로 발표 ('24.1.29)

* EU 집행위의 추진 정책을 발표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발표 기점으로 세부 정책 추진 및 입법 작업 본격화

- EU와 미·중 등 주요 경쟁국과의 산업 격차가 계속 심화되자, 현 집행위는 산업 부흥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절감

- 본 발표 내용에 따르면, EU는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에서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지난 20년간 EU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고 자평

- 아울러 EU는 저성장이 저소득·낮은 복지 수준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평가, 성장 궤도의 정상화를 위해 그린·테크 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핵심 자원에 대한 자율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

- 본 통신문 발표에 앞서 '24년 초부터 EU 민간 각계에서는 경쟁력 재건이 시급하다며 신속하고 일관된 경제·산업 추진 촉구

《최근 EU 경쟁력 강화 촉구 사례》

사례	내용
엔트워프 성명('24.2월)	▶ 유럽 산업계, 차기 집행위에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산업 정책 도입 촉구
레타 리포트('24.4월)	▶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전 총리, EU 싱글마켓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EU의회 선거('24.6월)	▶ 보수정당 중심으로 그린딜 위주의 규제 강화 정책 비판
드라기 리포트('24.9월)	▶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 EU 경쟁력 재건을 위한 각종 산업·금융 정책 제언
부다페스트 선언('24.11월)	▶ EU 정상, 레타·드라기 리포트에 기반을 둔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선언문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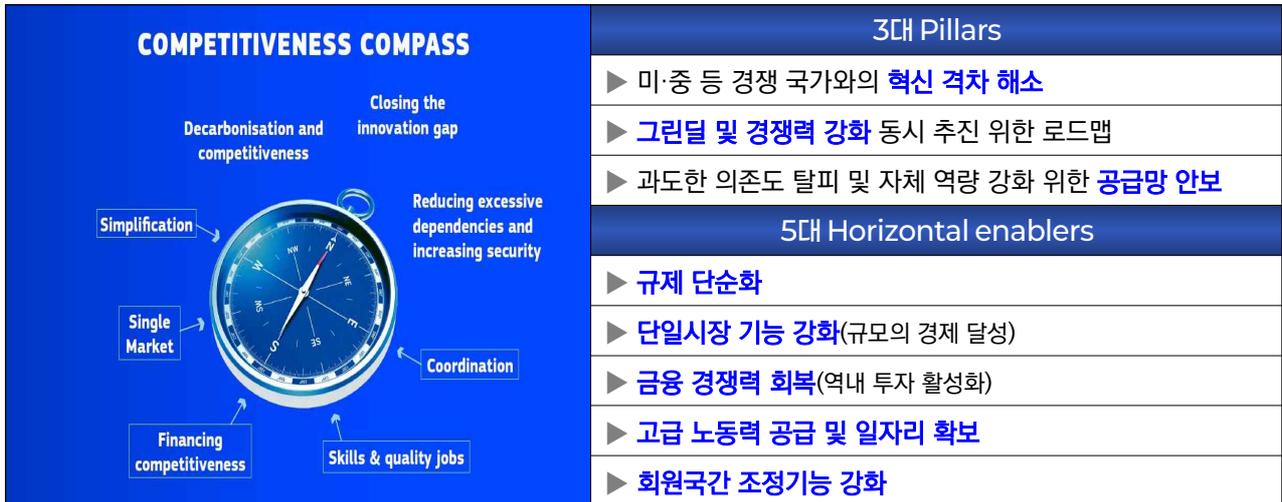
II

경쟁력 나침반 주요 내용

(1) 경쟁력 나침반 개요

□ EU 경쟁력 회복을 위해 3대 Pillars(핵심 정책 목표), 5대 Horizontal enablers(촉진 정책과제) 제시

- (3대 Pillars) EU가 경쟁력 나침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전략 과제 추진
- (5대 Horizontal enablers) 시장 접근성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 혁신에 필요한 자금 조달 편의성 강화, 인력 육성, 회원국간 조정기능 강화 등 EU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 추진



그래픽 : EU집행위 발표자료

□ EU는 상기 정책을 통해 변함없는 그린딜 추진과 함께 관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시도

(2) 「3대 Pillars」 주요 내용

① (혁신 격차 해소) 스타트업은 파괴적 혁신을, 기존 시장지배력 보유 기업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며 생산성 향상 선순환 사이클 회복

- 혁신 격차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규제 단일화, AI·양자역학·바이오·우주 등 핵심 산업 지원 등을 포함한 13가지 입법·전략 과제 추진 예정

《혁신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전략 추진 과제》

입법·전략(발표 시기)	주요 내용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25년 2분기)	▶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및 스케일업을 억제하는 요인* 진단 후 대응 전략 제시 * 산학 관계, 부진한 특허 상업화 및 인재 유치, 자본 조달 미흡, 싱글마켓 분절화 등
유럽혁신법('26년 1분기)	▶ 역내 혁신기업의 EU 연구·테크 인프라·공공 펀드로 창출된 지식 재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
28번째 법률체제('26년 1분기)	▶ 27개국 회원국의 상이한 법률(법인법, 파산법, 노동법, 세법 등)을 통합하고 간소화

입법·전략	주요 내용
유럽연구분야법('26년)	▶ GDP 대비 3% 수준의 R&D 투자 목표, EU·회원국간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EU 내 핵심 기술·인재 확산 추진
AI팩토리 이니셔티브('26년 1분기)	▶ 유럽 레벨의 AI네트워크 확장 추진, EuroHPC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컴퓨팅 능력을 개선하여 민간 차원의 AI모델 개발 지원
AI 적용, 과학·데이터 연합 AI 전략 ('25년 3분기)	▶ (과학·데이터 연합) 민간·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관련 규제 정비 ▶ (AI 적용) 제조·자동차·에너지·로보틱스·제약·항공·금융·공공헬스케어·법률 서비스 등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EU 클라우드·AI 개발법('26년 1분기)	▶ 민간 차원의 AI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AI 기가팩토리 설립 지원 ▶ EU 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 ▶ 반도체 설계·제조 역량 강화
EU 양자기술전략('25년 2분기) EU 양자기술법('26년 4분기)	▶ 기존 반도체법을 기반으로 분절화된 관련 규제 진단 ▶ EU·회원국 차원의 일치된 방향으로 육성 프로그램 및 투자 추진
유럽바이오테크법·바이오전략 ('25년-'26년) 생명과학전략('25년 2분기)	▶ (바이오테크법) 헬스테크 개발·임상 시험 기준 등에 선진화된 프레임워크 적용 ▶ (바이오전략) 바이오 기반 소재·제조기술·바이오화학·바이오농업 분야 성장 촉진
첨단소재법('25년 2분기)	▶ 스타트업의 연구·제조 등에 활용되는 첨단소재를 확산하도록 지원틀 마련
우주법('25년 2분기)	▶ EU 레벨의 우주 관련 안전 기준 및 지속가능한 우주산업 기반 확립, 회원국별로 분절화된 기준 조정
합병 가이드라인 개정(미정)	▶ EU 기업들이 산업·기술의 글로벌 혁신 트렌드 및 역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산업 분야 합병의 경우 기준 완화 개정 검토
디지털 네트워크법('25년 4분기)	▶ EU 내 디지털 네트워크(광케이블, 위성 네트워크, 6G,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구축 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정 준수 비용 절감 지원

② (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 기후 이슈에 대응하고 저렴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기존 그린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되, 그린딜 추진으로 역내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산업 정책 강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산업계에 대한 피해가 누적, 러시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EU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역내 자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며 에너지 가격 안정 추진
- 그린딜 추진과 동시에 관련 넷제로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산업·경쟁·경제·무역 등 전방위 지원 정책 추진, 벤처마킹·라벨링 제도, 공공조달·금융 인센티브 정책 활용
- 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 동시 추진을 위해 청정산업딜, 에너지 가격 안정 계획, 신보조금 체계, 순환경제법, 기후법 수정 등을 포함한 16가지 입법·전략 과제 추진 예정

《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전략 추진 과제》

입법·전략	주요 내용
에너지 가격 안정 계획('25년1분기)	▶ 가정·기업 전력 수요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및 역내 전력시장 통합으로 에너지 가격 인하 유도 ▶ 전력 시장에 대한 공적 지원과 산업 전력 수요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으로 전력 장기 계약 활성화, 전력 요금체계 개편 추진 등
전기화 행동 계획 및 그리드패키지('26년1분기)	▶ 역내 수소, 탄소포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일시장 수준의 에너지 운송·분배·저장 인프라의 현대화 추진

입법·전략	주요 내용
청정산업딜('25년1분기)	▶ 그린딜 실현 및 청정 산업 육성 관련 산업·경쟁·경제·무역 등 전방위 정책 추진 ▶ 청정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지원책 제시 및 회원국 차원의 세제 정비 유도
산업계 탈탄소화 가속법('25년4분기)	▶ 에너지집약 산업군의 탈탄소전환 지원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철강·금속산업 행동 계획('25년)	▶ 글로벌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 재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내 철강·금속 산업 지원 - 투자 수요 파악 및 지원, 1·2차 원자재 확보 지원, 무역방어 수단 등 활용
화학산업패키지('25년4분기)	▶ 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확보, 핵심화학물질 공급선 확보 등
자동차산업을 위한 전략대화 및 산업 행동 계획('25년1분기)	▶ 역내 자동차산업계와의 대화 추진('25.1.30 발족)을 통해 CO ₂ 규제 적용, 투자 장려책 등에 대해 집행위-업계간 의견 조율 - 업계 의견을 기반으로 액션플랜 설정(수요·공급 측면 장려책, 내연차 판매규제 조치에 e-fuel 예외 적용 포함, 기술중립성 강화 등) - 글로벌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규제 단순화,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역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전기차 수요 촉진(법인차량 친환경화 유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지원책 추진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투자 계획 ('25년3분기)	▶ 전기 충전 인프라 확산,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운송 연료 생산과 유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장려
항구 전략 및 해운 산업 전략('25년)	▶ EU 항만시설의 현대화 및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제시
고속철도 계획('25년)	▶ EU 역내 회원국간 접근성 증대를 위한 고속철도 네트워크의 확장
탄소국경조정제도 검토('25년)	▶ 본 제도를 우회하여 탄소를 누출하는 사례 방지 및 역내 산업이 글로벌 탄소 누출 관련 불공정 경쟁으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검토 ▶ 적용 대상 산업 및 하위 제품군 확대 검토와 관련 제품 수출시 영향 평가 시행
신지역보조금 체계('25년2분기)	▶ 회원국 각 지역별로 청정기술 전환 가속화를 위해 지역 보조금 체계 개편
순환경제법('26년4분기)	▶ 재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신규 원자재 사용량을 절감하고 폐기물 매립 감축
농업 및 식품 비전('25년1분기)	▶ 농업 분야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해양 협정('25년2분기)	▶ 해양 지역 및 해안을 활용한 신청정기술 개발, 청정 에너지 생산, 식량 안보 증진
기후법 개정('25년)	▶ 기존법 검토를 통해 EU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

③ (공급망 안보) 특정 국가·지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공급망 체계를 정비, 기업들의 안정적 역내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자체 공급망 역량 구축

- 다양한 국가·지역과의 무역협정 추진과 동시에 공공조달 지침 개정을 통한 역내산 우대 등 보호무역조치 강화
- 고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과잉 유발하거나 자국에 의존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 중인 국가·지역에는 정책 믹스로 대응
- 타 국가 제품·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방위산업 역량 개선을 포함, 공급망 안보를 위해 11가지 입법·전략 추진과제 제시

《공급망 안보를 위한 입법·전략 추진 과제》

입법·전략	주요 내용
무역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전방위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우방국들과 무역협정 체결 추진 - Digital Trade Agreements(싱가포르 체결, 한국과 협상 중)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과 협력으로 규정 준수비용 감소) - 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s(앙골라 체결) -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핵심 원자재·청정 에너지, 청정 산업 확산을 위해 투자·규제 관련 역외국과와 협정 추진)
지중해 연안 에너지 및 청정기술 협력 이니셔티브('25년4분기)	▶ 지중해 연안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 촉진
핵심 원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25년3분기)	▶ EU 차원에서 회원국별 핵심원자재 수요 통합 관리 -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 중인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선 다변화 추진
핵심 의약품법('25년1분기)	▶ 핵심 의약품 및 원료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와 대외 공급 의존도 축소
공공 조달 지침 개정('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역외 국가의 보조금 정책에 따른 과잉 저가 공급 및 시장 접근 제한 조치에 대응하고 EU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 목적 ▶ 핵심 산업 및 기술 분야 공공조달 시 역내산 우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의 조달시장 접근성 강화
EU 방위 미래 백서('25년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역내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부터 생산까지 공급망 구축, 회원국간 공동 조달 추진 ▶ Defence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추진 통해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금융 조달 지원, 역내 방산 시스템 통합 등 지원
대비 연합 전략('25년1분기)	▶ 비상물자 구축, 공동 공공조달 추진 등으로 EU 차원의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공급망 위기 및 유사 상황 대응력 강화
내부 안보 전략('25년1분기)	▶ 온·오프라인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EU 대응 방안을 EU 규정·정책에 반영
EU 기후 적응 계획('26년)	▶ 기후 위험 평가 정기적 시행, 핵심 인프라와 도시 계획에 기후 회복력 요소 반영, 자연 기반 해결책 도입 추진
수자원 복원력 전략('25년2분기)	▶ 수자원 이용 효율성 및 관련 인프라 개선,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략 제시

(3) 「5대 Horizontal enablers」 주요 내용

- ① (규제 단순화) EU 내 투자 기업들 중 약 2/3가 투자 장애 요소로 지목한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EU·회원국·지방 정부 등 모든 차원에서 행정처리 가속화를 위해 규제 단순화 추진
- (규제 단순화 집행위원 임명) EU집행위 최초로 규제 단순화를 위한 집행위원(발디스 돔브로브스키)을 임명했으며, 법률 통합·간소화·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구체적 이행 방안 등은 '25년 2월 발표 계획)
 - 집행위 부처별 집행위원들도 매해 두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과 회의를 개최, 기업들의 행정부담 완화 및 규제 단순화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
 -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준수 행정처리 부담은 각각 최소 25%, 35% 경감시킬 계획
 - 탄소중립 관련 핵심 산업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신속 인허가 행정처리 지원
 - 단일시장으로의 규제 조화를 위해 집행위 차원에서 필요시 강력한 조정수단 활용

- (REACH 개정) EU 화학물질 관리규정인 REACH 개정을 통해 위험 화학물에 대한 신속한 판정 처리를 지원하고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적용 기준 단순화
- (헬스케어 산업) 의약 및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규정 및 기준도 단순화되도록 지원
- (규제 도입 시 영향평가)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유발되는 비용을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기 위해 중소기업·경쟁력 영향평가 시행

《규제 단순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정책》

입법·전략(발표 시기)	주요 내용
옴니버스 규제 단순화 및 중견기업 기준('25.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옴니버스) 공급망실사지침(CSDD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택소노미(Taxonomy) 대상으로 기업들의 중복 보고의무를 해소 ▶ (중견기업) 중견기업 규모의 기준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처럼 규제 적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1월부터 본 이행기간에 접어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중견·중소 기업 적용 기준 완화 추진
유럽 비즈니스월렛('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기업들의 공공 기관 제출 서류 등을 전자화하기 위해 비즈니스월렛 도입 ▶ 비즈니스월렛을 통해 인보이스, 서명, 제출, 제품별 전자패스포트(배터리 등) 등에 활용

② (단일시장 기능 강화) 역대 시장규모 확장,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회원국 간 단일시장 형성 추진 및 장애 요소 제거

- 지난 30여 년간 단일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2025 단일시장·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EU 차원의 단일시장 추진은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
- 레타 리포트에 따르면, 전자 통신, 에너지, 금융 시장, 방위 산업 등에서 단일시장을 형성해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제언
- 강화된 '단일시장 강화 태스크포스(SMET)' 및 향후 추가 조치 등을 통해 단일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 및 EU 입법조치 조정

《단일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정책》

입법·전략(발표 시기)	주요 내용
기준표준화 개정('26년)	▶ 산업별 신속한 기준 제정을 통해 첨단산업(5G·6G 통신, AI, 재생에너지 기술, 전기차 충전 인프라, IoT 등)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시장 접근성 강화
단일시장 전략('25년 2분기)	▶ 단일시장 형성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현대화하여 회원국간 협력을 유도하고, 단일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기존 장애요소 제거, 신규 장애요소 창출 방지

③ (금융경쟁력 회복) EU는 청정 전환, 디지털화, 산업 혁신 등 전방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하며, 동 자원 확보를 위해 역대 저축·투자 연합 추진, 재정 집행 효율화 등 추진

- (자본시장 통합) EU의 분야별 산업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자원 조달이 필요하며, EU·회원국은 민간·공적 투자자금이 효율적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입되도록 자본시장 통합 필요
 - 드라기 리포트는 EU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7,500-8,000억 유로(EU GDP 대비 매년 5%p 증가)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
 - EU의 가계저축률은 '22년 기준 미국 대비 65% 높은 수준이나, EU의 분절된 금융시장 구조에 기인한 낮은 수익률로 인해 역대 투자로 유입되기보다 매년 3천억 유로가 역외 투자로 유출
 - 역대 산업 혁신을 위한 벤처·자본 투자는 과도하게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의 투자는 지지부진

- **(재정집행 효율화)** EU 자금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순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방식을 효율화
 - EU는 3가지 핵심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STEP규정(STEP Regulation)’을 통해 11개의 개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분산된 예산을 통합 지원 중
 - * 디지털 기술 및 딥테크 혁신, 청정 기술 및 자원 효율 기술, 바이오 기술
- **(유럽투자은행(EIB) 역할 강화)**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경쟁국과의 투자 규모 격차를 해소하도록 EIB의 역량을 강화
 - InvestEU 프로그램 펀딩 조달 시 총 2,180억 유로 중 65%가 민간 자본이며, 민간 투자액에 대한 공공 위험 분담 및 보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공공 보증액의 15배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 핵심 분야에 대규모 투자 지원을 위해 EU 자원과 결합된 보증, 대출, 혼합형 금융, 지분투자 방안 모색

《금융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부 추진 정책》

입법·전략(발표 시기)	주요 내용
저축·투자 연합('25년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투자자를 위한 EU 차원의 저비용 저축 및 금융 상품 마련하고 연금 투자 재원이 성장성 높은 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 ▶ 역내 금융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회원국별 과세 장벽 등 제거 추진 ▶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을 지원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 회원국별로 분절화된 기업 파산 절차 통합
차기 다년도 재정정책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MFF(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을 통해 경쟁력 회복에 예산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EU 예산은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에 분산되어 있어 핵심분야에 대한 공공기금 투입 효과가 낮고, 기업 입장에서 기금 신청 및 사용절차가 복잡함 - EU 경쟁력 기금(European Competitve Fund)을 신설하여 AI, 우주, 청정, 바이오 등 기술·생산 분야에 지원 자금이 집중되도록 유도

④ (고급 노동력 공급 및 일자리 확보) EU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직업역량 강화, 노동시장의 이동성 개선, 경제활동 참여 인구 확대, 사회보장제도 현대화를 추진

- EU의 고용 환경은 양호하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직업역량 강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청년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 필요
 - '23년 기준으로 EU 내 고용 인구는 2억 1,650만 명으로 증가, 고용률이 75.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의 6.1% 실업률을 기록
 - 그러나 EU 내 중소기업의 80%가 적절한 기술을 갖춘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도 격차(Skills Gap)는 여전히 존재

《고급 노동력 공급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 정책》

입법·전략(발표 시기)	주요 내용
기술 연합('25년 1분기)	▶ 일자리 수요와 직업 역량 조화를 위해 평생학습, 직업역량 유지 및 개발, 역내 노동력 이동 원활화, 직무전환 유연성 제고 추진
양질의 직업 로드맵('25년 4분기)	▶ 나이 및 성별을 불문하고 노동가능 인력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임금 수준 등을 개선
기술 이전 이니셔티브('26년)	▶ 전문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비EU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Talent Partnerships (인재 파트너십)과 EU Talent Pool(EU 인재 풀)을 구축

⑤ (회원국간 조정기능 강화) ‘경쟁력 조정 수단’을 도입해 EU 최우선 과제에 EU 자원 집중 투입

-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함께 산업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여 EU 공동 경쟁력 강화를 추진
 - EU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존 회원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산업 정책을 EU의 연합된 레벨에서 추진
 - EU 예산을 경쟁력 강화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동 예산이 타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과의 ‘투자연합’으로 집행되도록 유도
-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AI, 생명공학, 핵심의약품 생산 등 일부 산업군에 정책 조정을 시범 적용할 계획

《회원국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정책》

입법·전략(발표 시기)	주요 내용
경쟁력 조정 수단(‘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조정 수단’을 도입하여 EU 차원의 산업 및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EU 자원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간 협의를 통해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연구·투자 분야의 공통된 우선순위 설정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의 R&D, 산업적용 및 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 방식(보조금, 대출, 지분투자, 조달 등)으로 예산 집행 - 경쟁력 조정 수단 관련 예산은 ‘28~‘34년 다년도재정운영계획(MFF) 내 신경쟁력 기금(a new Competitiveness Fund)을 통해 신규로 수립